

‘인천공항~해남~완도’ 연결 공항버스 생긴다

인천공항~영암~해남·화순~장성~인천공항 노선도 신설 지방 관광활성화 차원...독점적 방지 운영기간 11년 한정

올해 하반기부터 인천공항에서 해남·완도를 연결하는 공항버스가 운영된다. 또 인천공항에서 영암~해남을 잇는 공항버스도 운영되며, 화순~장성에서 인천공항을 갈 수 있는 시외버스도 신설된다. 국토교통부가 올 하반기 지방공항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항버스 8개를 포함한 총 23개 노선을 새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노선 신설은 철도 운행 횟수가 적거나 환승이 불편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국토부와 각 시·도는 사업자 신청을 받아 관계기관 의견과 노선 타당성, 기존 노선과의 결합 여부 등을 검토해 인가 여부를 결정했다. 시외버스는 지방공항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항버스 노선 8개가 신설된다. △인천공항~해남~완도 △화순~장성

~인천공항 △인천공항~영암~해남 △부안~서천~인천공항 △김해공항~전주~익산~군산 △청주공항~김천~구마~동대구 △전주~완주혁신도시~청주공항 △서산~당진~청주북부~청주공항 등이 대상이다. 국토부는 특정 사업자의 독점 운영을 막기 위해 신설 노선 운영 기간을 11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노선 인가 후 1년 안에 실제 운영

을 시작하지 않으면 인가를 취소하고, 무단 미운행이나 임의 경로 변경 사업자에 대해서는 노선권 폐지까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시의·고속버스 필수노선제’를 계기로 버스 공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고속버스는 △서산~전주 △청주~당진 △청주~보령 노선 △평택~창원

노선도 신설된다. 또한 △서울~포항 △서울~서산 노선 일부 운행 편은 중간 정차지를 추가하거나 종점을 변경해 운영된다. 박재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시외·고속버스 노선 신설이 지역 간 연결성과 지방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생명존중 캠페인 20일 오전 광주 서구 풍암동 서빛마루시니어센터에서 열린 ‘자살 급증지역 공동대응을 위한 생명존중 캠페인’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우울검진 및 심층상담, 마음 힐링 프로그램(캐리커처) 등을 받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이 대통령 “민주항쟁 모욕 ‘심각한 문제’”

국무회의서 스브·무신사 비판...“조직적 공개 만행”

이 대통령은 20일 논란을 받고 있는 스타벅스코리아의 ‘뱅크 데이’ 이벤트와 무신사의 옛 광고문구와 관련해 “사람의 발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진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및 제9차 비상경제 정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사회 공동체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선을 잘 지켜야 한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상식의 선이다. 금도라는 것도 있다. 남지 말아야 할 선이 있고 상도라는 것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것도 한 개인이 구석에서 또는 몇몇 개인들이 술 먹으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공개된 자리에서 책임 있는 인사들이 조직적·체계적으로 그런 만행을 저지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희생자들과 시민들의 피 어린 투쟁을 모독하는 ‘5·18 뱅크 데이’ 이벤트라니...”라며 “대한민국 공동체와 기본적인 인권, 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하는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는 6월 민주항쟁에 대한 비하 표현을 담은 무신사의 옛 광고를 엑스에 공유하며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진, 그로 인해 시작된 6월 민주항쟁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광고”라며 “돈이 마귀라지만 사람의 발을 쓰고 이럴 수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스타벅스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지난 18일 뱅크데이 행사를 진행해 논란을 빚자 무신사의 과거 광고도 소셜미디어에 다시 소환돼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어떻게 (이것을) 인건사회라고 할 수 있겠나. 꼭 형법이 정하는 처벌이나 물리적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한들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라며 “사람에 요구되는 인륜 도덕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논란을 빚은 스타벅스코리아를 향해 엑스(X·옛 트위터)에서 “역사적인 광주

이성우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공사 또 특정규격 논란

“지역 업체 입찰 제한” vs “안전성 강화 적용”

복공판 증액·강제투류판 감액 미반영 쟁점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공사가 또다시 특정 규격 논란에 휩싸였다. 복공판과 강제투류판(강제출마이판)이 제한된 규격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에 이어 설계변경 과정에서 복공판은 공사비가 증액된 반면 강제투류판은 감액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공정입찰과 지방재정 운용 적정성 논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20일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와 구조용금속판넬제작협동조합 등에 따르면 논란은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공사에 사용되는 복공판과 강제투류판 등 가시철 자재의 규격 및 설계변경 과정에서 불거졌다.

복공판과 강제투류판 등을 생산하는 광주·전남지역 중소 제조업체 11개사로 구성된 구조용금속판넬제작협동조합은 광주 북구·광산구 일대 약 20km 구간에서 진행 중인 2단계 공사에서 특정 형상·규

격 위주의 입찰 방식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조합이 확보한 8공구 현장설명서에는 ‘무늬 H형 복공판 자체 납품’이 명시돼 있고 규격 역시 ‘1000mm×1990mm×200mm’로 구체화돼 있다. 또 ‘DEVIATION 없음’ 조건까지 포함돼 사실상 다른 규격 제품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게 조합 측 설명이다.

14공구 입찰조건 자료에도 ‘무늬 H형 복공판’을 전제로 DB-24 기준 충족, 구조제산서 제출, 특정 제한 조건 등이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제투류판 역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전 공구에서 SGC560Y 단일 규격 위주로 적용되고 있다는 게 조합 측 주장이다.

조합 측은 “문제의 핵심은 자체 성능이 아니라 특정 규격 제품 위주로 짜인 입찰 방식”이라며 “건설사 사용기준을 충족하

는 일반 제품도 공급 가능하지만 실제 입찰은 제한된 규격 제품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설계변경 이후 공사비 문제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조합 측이 확보한 12공구 실정보고서에는 복공판 관련 금액이 약 16억원가량 증액된 반면 강제투류판은 ‘증감 없음’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은 복공판 설계변경에 따른 전체 공구 증액 규모가 약 1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조합 측은 “일반 자재로 설계변경할 경우 강제투류판은 가격 절감이 가능할데도 감액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형평성과 지방재정 부담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복공판과 강제투류판이 발주청이 아닌 각 공사 본사 주관으로 선정되는 사급자재라는 입장이다. 시공사별로 입찰업체 규모와 매출, 신용평가 등을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어서 발주청이 특정 업체를 제한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

니라는 설명이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또 2024년 피로시험 기준 강화 이후 기존 PLATE형 복공판보다 H형강 복공판이 강성과 피로파괴 측면에서 유리해 전국적으로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제투류판 감액 미반영 논란에 대해서도 일부 구간은 기존 SM490보다 강도가 높은 SGC560Y 강종을 적용해 성능을 강화한 만큼 공사비 감액 없이 당초 공사비 범위 내에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특정 업체 중심 논란과 관련해서는 “각 시공사마다 납품 업체가 다르고 디자인권 보유 업체 외에도 여러 업체가 납품 중”이라며 “특정 업체 중심 체계는 아니다”고 전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관계자는 “현장에 반입되는 복공판은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라 공장검수와 시험성적서 확인 등 공급된 승인 절차를 거쳐 사용되고 있다”며 “시민 안전과 품질 기준에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통합특별시 출범 앞두고 ‘미래 비전’ 강조

▶1면에서 AI 기반 미래 산업 집적화를 위한 투자 선도지구 지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기반 문화관광특구 지정, 하남산단 기반시설 정비와 경쟁력 향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국혁신당 배수진 후보는 변호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과 이재명 정부 사회대개혁위원회 운영위원을 지냈다. 검찰개혁과 정치개혁 등 개혁 의제를 중심으로 민주당과 겹치는 진보 성향 표심 공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1호 공약으로 5·18정신 협법전문수목 개원 완수와 5·18 예곡·평해 방지방 개정 추진을 약속했다. 진보당 전주현 후보는 광주시의원과 돌봄서비스노동조합 광주지부장 경력을 앞

세워 노동·돌봄·민생 의제를 강조하고 있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는 기본소득당 최고위원과 국무총리 산하 사회대개혁위원회 위원 경력을 바탕으로 기본소득과 사회 대개혁 담론을 부각하고 있다. 그는 1호 공약으로 공공투자 이익공유제를 포함한 광산구의 산업 혁신을 위한 4대 비전을 내놨다. 무소속 구본기 후보는 촛불행동 공동대표 출신 활동가로, 내년 청산과 자주 정치 등을 주요 메시지로 내세우고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광산을 보궐선거는 민주당 대 비민주당의 구도가 형성됐다”며 “민주당의 우세 속에 비민주당 진영에서 일당독점의 폐해를 부각하고 있는 만큼 얼마나 득표를 얻을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남도, 청년마을 자립 활성화 지원 강화

창업지원 등 최대 5000만원

전남도는 조성 완료된 청년마을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정착과 창업·일자리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청년 자립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 대상 5개소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원을 바라는 청년마을은 오는 29일까지 해당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선정되면 창업 지원, 수익모델 발굴, 전문 컨설팅 등을 포함해 개소당 최대 5천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사업은 조성 완료된 도내 청년마을을 대상으로 올해 새롭게 추진한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종료 이후에도 자립 역량 등을 강화해 청년 마을이 안정적으로 운

영되도록 마련했다. 기존 조성 청년마을 중 창업이나 자립 기반 형성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선정해 운영 현황과 자립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운영체제와 경제적 자립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단순 공간 조성이나 프로그램 운영에 그치지 않고, 청년의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수익모델 개발, 시제품과 콘텐츠 제작, 판로 개척, 마케팅 등 창업 활동 전반을 지원할 예정이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청년마을이 지역 자원과 연계한 수익사업 발굴 등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갖추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스스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시, 삼거동 자원회수시설 후보지 취소

주민등록법 위반 확인...주민동의율 50% 기준 미달

입지선정위 의결 거쳐 공모요건 미충족 최종 판단

위장전입 의혹이 드러난 광주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 입지 후보지가 최종 취소 결정됐다. 광주시는 20일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제22차 회의를 열고, 광주광역시 자원회수시설 입지 최적후보지로 선정됐던 광산구 삼거동 일원에 대해 후보지 자격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최근 검찰 수사 결과로 드러난 위장 전입 등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을 바탕으로, 당초 공모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삼거동 최적후보지의 자격에 대한 심의·의결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당초 진행된 3차 공모의 핵심 요건은 ‘부지경계 경계 300m 이내 실제로 거

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의 주민동의율’이었다. 그러나 최근 검찰 수사를 통해 위법하게 등록된 주민등록 사항이 확인되면서, 이를 제외한 실제 주민동의율은 기존 54.5%에서 47.3%로 떨어졌다. 결국 공모 최소 기준치인 50%를 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정미경 시 자원순환과장은 “공모의 가장 핵심적인 요건이 훼손된 만큼,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최적후보지 자격 취소를 결정하게 됐다”며 “이번 취소 처분에 따른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한 뒤 향후 후속 추진방안을 긴밀히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전남광주 통합대도 공무원 출장여비는 동일 지급

인사혁신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더라도 기존 관할구역 기준에 따라 공무원의 출장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공무원이 출장 시 근무 지역이 아닌 1~2만원의 출장비를, 근무지역 바깥이면 일비·식비 각 2만5000원과 실비로 계산한 숙박비·운임을 지급한다

고 정한다. 그런데 전남과 광주가 통합되면 같은 근무 지역으로 묶이기 때문에 먼 거리로 출장을 가더라도 ‘근무지 내’ 출장비 규정이 적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통합 이후에도 종전 사·군 간 이동은 ‘근무지 외 출장’으로 인정돼 일비·식비와 숙박비 등을 기존과 같이 받을 수 있다. 이성우 기자 solee235@